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고창군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전북은 없다'

민주 김수흥 의원 "지방 외면尹정부 정책 강력 시정해야"

총 7조877억을 사용하고, 122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중심 주택정책과 교통대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지난 16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8·16대책에 대해 민간 공공 부분의 공급계획 모두 수도권만 고려한 편중된 주택정책임을 지적했다.



정부는 발표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급계획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내에서도 광역시도를 제외한 8개 도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공급보다 훨씬 축소되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5년간 비수도권 8개 도의 주택공급물량은 민간부분은 2만호, 공공부분은 10만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 6만호, 공공 15만호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통망 확충에서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GTX A 노선 조기 개통(24.6월 이전) GTX B, C 노선의 조기 착공 등이다.

이에 대해 김수흥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솔림현상이 분명한데도 이를 분산시키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는커녕 지방을 홀대하고 외면하여 지방소멸로 이끄는 대책"이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제4차 광역교통계획 추진 현황(2021년~2025년)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솔림 현상이 분명하며, 그중에서도 전북 강원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으며 지방을 소멸로 내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울러 김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경수 기자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유치, 정치적 이용 안돼"

도의회 의원들,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 등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고창에 건립돼야" 공정·투명성 담보 평가 통한 유치 주장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는 유네스코 5관왕 고창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전북도의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의 최적지는 고창군이다"며, 공정·투명성이 담보된 평가를 통해 고창에 유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의원들은 "고창은 유형 무형, 자연의 모든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생태 문화, 관광 도시이다"며 "이러한 우수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고창이 세계자연유산 갯벌 관리의 지정학적인 최적지이다"고 고창의 우수성을 어필했다.

또, "대한민국은 수도권 vs 지방, 지방 vs 지방의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남의 순천만 국가정원, 완도의 해양수산과학원 등 지역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전북 고창에 건립되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의회 의원들은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공모계획의 일부 평가항목이 변경된 점에 대해 "세계유산은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일부 지자체가 공모가 발표되기도 전에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인류에게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세계 유산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이번 공모는 320억 원 규모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고창군과 전남 신안군, 충남 서천군 등이 경쟁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원내지도부 지원 절실"

민주 전북의원들 7명 박홍근 원내대표에 건의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건의했다.

한병도 위원장은 22일 오후 김성주·인호영·김수흥·신영대·윤준병·이원택 의원과 함께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기국회 내 신속한 논의와 통과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초광역제 가시성 정책에 포함되지 못했고, 제주와 강원도 부여받은 특별자치도 지위마저 없어 정부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인구 감소와 경제쇠퇴 등 복합위기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22일 오후 김성주·인호영·김수흥·신영대·윤준병·이원택 의원과 함께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기국회 내 신속한 논의와 통과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수적인 만큼 원내지도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회답했다.

한편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경수 기자

도, 재해위험지역 정비 우수사례 2곳 선정

부안·완주 등... 총 5억 확보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 심사 결과 2개소가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국비 인센티브 5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부안군 완주군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2건을 신청했

다. 1차 서류심사·2차 발표심사를 거쳐 부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우수)과 완주 수면3 급경사지 정비사업(장려)이 최종 선정돼 각각 국비 3억원과 2억원의 국비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부안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부안읍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가지 하수도관로 정비를 검토해 예산 중

복투자를 방지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신원 봉덕 선은천)과 연계한 공사로 하천 확장 및 개보수 사업비를 절감했다.

완주군 수면3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사면 안전성 해석결과 해기 파괴 가능성 및 무한사면 형성으로 공사 이후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해 우회도로 및 교량설치계획안으로 시공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류임철 신임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취임

행정안전부 제59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에 류임철 전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22일 취임했다.

류임철 신임 원장은 코로나19 재유행을 고려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과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업무에 돌입했다.

류 원장은 경북 무학고와 경북대 행

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장,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서울청사관리소장,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자치분권정책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류임철 원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새로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우선적으로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지방핵심 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